

#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2014-35
----------	---------

발의일자 : 2014. 10. 24.

제안자 : 김병진의원 외 16명

## 1. 주 문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도시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1명이 채 안되는 0.968명으로, 전국 평균인 1.187명 보다 낮다. 게다가 평균 출산 연령 또한 32.5세로 전국 평균 31.8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도시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보육·양육비 지원, 출산물품지원, 아이낳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중 경제적 지원의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마다 추진중인 출산장려정책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어, 복지수요가 많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 사회복지비는 재정의 절반을 넘어 5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출산장려금의 지나친 편차문제, 출산장려금 지급 시 일정기간 거주요건 제한에 따른 위장전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년간 초저출산율인 1.3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출산율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60년엔 44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2750년에 멸종의 운명을 맞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급속한 사회변화와 이로 인해 미래 경제활동인구의 노년층 부양비 부담가중, 자녀 세대의 경쟁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바, 이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일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부담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출산장려금 지원문제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중앙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하라.
2.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가시책인 출산장려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4. 10.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의원 일동

##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결의안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도시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1명이 채 안되는 0.968명으로, 전국 평균인 1.187명 보다 낮다. 게다가 평균 출산 연령 또한 32.5세로 전국 평균 31.8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도시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보육·양육비 지원, 출산물품지원, 아이낳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중 경제적 지원의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마다 추진중인 출산장려정책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어, 복지수요가 많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 재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 사회복지비는 재정의 절반을 넘어 5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출산장려금의 지나친 편차문제, 출산장려금 지급 시 일정기간 거주요건 제한에 따른 위장전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년간 초저출산율인 1.3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출산율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60년에 4400만명으로 줄어들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2750년에 멸종의 운명을 맞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급속한 사회변화와 이로 인해 미래 경제활동인구의 노년층 부양비 부담가중, 자녀 세대의 경쟁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바, 이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일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부담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출산장려금 지원문제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58만 강서구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앙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하라.
2.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가시책인 출산장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4.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의원 일동